

【 주간포커스 】

최근 가계부채 우려와 문제점

유경원 연구위원

하반기 금리 인상 가시화,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가계부채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.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혼재한 상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과도하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가계의 불안감 및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가계의 쏠림현상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. 가계부채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장 스스로가 가계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.

□ 하반기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○ 7월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「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」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분의 3/4분기 신용위험지수가 20으로 2/4분기 16에 비해 4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- 「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」는 국내 16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서베이조사
- 신용위험지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클수록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

○ 이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주택가격 하락,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

□ 그러데 가계부채 수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시자료 분석 결과와 미시자료 분석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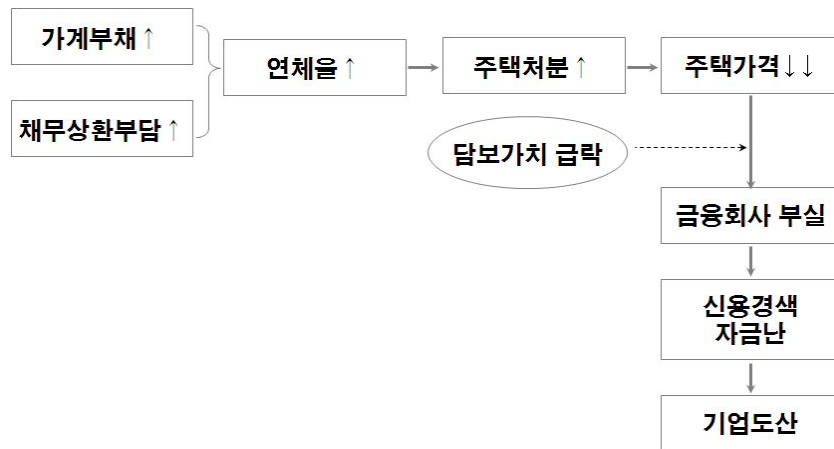
□ 먼저, 가계부채가 경제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주로 거시 지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
- 첫째, 가계부채 관련 거시지표를 살펴볼 때 개인가처분 소득 내지 GDP 증가율 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
- 둘째, GDP 또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등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거시지표가 신용카드 위기나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거나 높아짐.
- 셋째, 또한 이들 거시지표들이 소비자금융이 발달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도 높거나 유사한 수준임.
 - 특히,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조정 (deleveraging)이 이루어지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조를 보임.
- 넷째,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구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,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변화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.
 - 이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이며 만기가 짧기 때문.

□ 다음으로 이에 대한 반론의 경우 거시 및 미시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

- 첫째, 거시지표의 경우 개인부문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고 실물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임.
- 둘째, 국내 금융회사의 총격흡수 능력도 양호한 수준
 -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.5~0.6%로 안정적인 수준
 -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BIS 비율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
- 셋째,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중·고소득계층이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출잔액 증가도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
 - 중·고소득(4·5분위)계층이 전체 가계부채 중 63% 정도를 보유
- 넷째,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지표인 담보인정비율(LTV)이 2009년 하락(36% → 34%)하였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(미국, 일본, 영국, 프랑스의 경우 70~80%)
- 다섯째,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으나 각 단계별, 고리별 객관적 근거가 취약(그림 참조)
 - 시나리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주택의 처분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단계별로 나타나야 할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.
 -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이 40%를 넘지 않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충분하여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¹⁾

<그림 1> 가계부채발 위기 시나리오



- 다만, 소득 위험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 및 하위신용계층이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제기
 -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취약계층은 전체가구 중 약 3% 정도로 추정됨.

□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흔재한 상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과도하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.

-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적으로 가계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
- 그러나 가계부채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불안감 내지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가계의 쓸림현상을 유발하고 주택가격 급락을 촉발할 수도 있음.
 - 정상적인 시장여건 하에서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단화될 때 동 문제는 경제위기로 실현화될 가능성도 상존
 - 현재와 같은 유럽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계부채발 시나리오의 실현화를 촉발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임.

1)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를 고려할 때 80%대에 불과하고 자가주택비율이 전국은 55.6%, 서울은 44.6%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

□ 가계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가계부채의 특성상 시장 스스로의 문제 처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정부의 정책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- 가계부채는 개인의 의사 결정이고 또한 개인 특성이 상이하므로 금리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개인들의 가계부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시키고(예를 들면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화)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킬 필요
-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및 하위신용계층의 경우 질병이나 재해, 실업과 같은 소득위험에 취약하므로 소득보장기능을 하는 고용보험과 공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전반적인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²⁾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
 - 공적 사회보험의 빈곤층 보호기능이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득충격에 대한 사적대비 수단으로써 적은 보험료로 사고나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 - 소득충격으로 인해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 파산계층의 경우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 KIRi

2)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상환조건의 조정 및 채무탕감 등을 통해 개인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크게 채무조정제도(개인 워크아웃제도 및 개인회생제도)와 파산제도로 구분됨.